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과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교육의향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바로 교사와 공무원들이다. 세계 대다수 나라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교사 출신이 상당수 의원으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만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

이제는 50만 교원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사에게 국회의원 총선은 물론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까지 단일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위가 금지돼 있다.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자유도, 후보자를 뽑는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 정치후원금도 기부할 수 없고 지지하는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있다. 교사는 그 직을 면하지 않고는 어떤 선거에도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 교육정책 공약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근무여건을 결정하고 학교의 교육 방향과 정책을 책임질 교육감 후보에게조차 지지선언을 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금지산자인 것이다. 오죽하면 ‘교사는 정치적 천민’이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한다.

정치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교사를 두고 인도의 카스트제도에서 말하는 불가촉천민인 달리트에도 들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적어도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대상인 학생들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이다. 정치적 기본권

박탈은 공무원에게도 해당된다. 공무원들의 정치권 기본권을 요구해왔으나, 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십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비해 대학 교수는 모든 정치적 불평등에서 자유롭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애매한 명제에 묻혀 정치에서만만큼 항상 주변인으로 살아야 하는 공무원과 교원들은 정치적 소외자로 민주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하루빨리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게 한다는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먼저 민주주의 온전한 전당과 산실이 되어야 한다. 교육을 개혁해 학교를 민주주의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50만 교원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정치 기본권도 마찬가지.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에는 민주시민을 위한 각종 공약이 제시됐다. 그중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을 가능하기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부터 만들기 바란다. 진정한 민주시민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뭔지 살피고 법 개정 또는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22대 국회의원의 당선을 축하하고 교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92년 총선 이래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사전투표에서 31.3% 최고 투표율이 나오더니 본 투표까지 67%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 대표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크다. 시민들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 제정과 개정의 권한 있기 때문이다. 시민을 위하고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은 남다른 민주 의식과 정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엄격한 기준과 자질을 따지는 이유이다.

선거는 끝났다. 범야권의 승리, 여권의 처절한 패배였다. 가장 충격적인 선거 결과다. 실정을 거듭한 윤석열 정권에 심판론에 시민들에게 어필했다는 평가다. 무지, 무능, 무책임한 정권,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던 윤 정부에게 시민들의 냉정하고 엄격한 심판을 내린 것.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성찰과 경고를 줬다.

이번 22대 총선에 임하는 마음은 남달랐다. 시민이면 누구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정치적 활동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 정치적 금지산자들이 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3일(현지시각)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러시아 군인으로 분장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며 고문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 단체 구성원들은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인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포로들의 목소리’라는 행사를 열었다. AP/뉴시스

서석대

국회의원을 흔히 ‘금(金)배지’라고 부른다. 일종의 별칭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금배지를 달았다”며 축하해준다. 이 금배지를 달기 위해 4년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금배지는 금빛이지만 도금이다. 10대 국회 때까지는 순금으로 제작됐다. 그러다 11대 국회부터는 99% 은(銀)으로 제작하고 미량의 금으로 도금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사실은 ‘은배지’인 셈이다. 물론 순금 배지를 원한다면, 순금 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지름은 1.6cm, 무게는 약 6g이다. 배지의 개당 가격은 3만5000원이다. 값싼 배지에 불과하지만 아무나 달고 다닐 수는 없다.

금배지는 무궁화 형상 안에 한글 돌움체로 ‘국회’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 국회 한글화에 따른 것이다. 1950년 제2대 국회부터 무궁화 형상과 그 안의 글자가 10차례 바뀌다가 2014년부터 ‘국회’라는 두 글자를 모두 넣게 됐다. 한자 ‘國이 ‘의심할 혹(或)’자로 보인다는 의견에 무궁화 안의 동그라미가 네모로 바뀌기도 했다. 배지 마다 일련번호도 새겨져 있다. 국회의원 등록 순서대로 배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록하는 당선인이 첫 번째 배지를 받게 된다. 국회의장이 ‘1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남녀 디자



인도 다르다. 남성용은 정장 상의 옷깃에 꽃고 둘러서 고정하도록 한 나사형이다. 여성용은 브로치처럼 옷핀 형태로 돼 있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당선인 300명이 금배지를 달게된다. 이 가운데 40대 이하 청년 당선인은 44명으로, 지난 21대 총선(41명)보다 3명이 늘었다. 여성 의원 수는 60명(비례대표 24명)으로 21대와 비교하면, 역시 3명이 늘어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 중 여성 지역구 당선인은 36명이다. 21대 총선에서 29명이 당선된 이후 최다 기록

이다. 전체 총선 의원은 비례대표 42명을 포함해 131명(43.7%)으로 가장 많다.

국민들이 이들에게 최다 금배지를 달아준 이유는 명확하다. 소신과 패기로 지금의 후진적 정치행태를 바꿔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여야, 계파를 떠나 ‘조선다운 쏘소리’를 내달라는 요구다. 6g 금배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다. 권력 앞에 눈치 보고, 연판장을 돌리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21대 조선의 모습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 국민의 목소리다.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社說

포용·지원 ‘다문화 사회’ 위한 전남 되길

전남 다문화 가구원 5만 시대

전남도내 다문화가구원 수가 5만 시대를 넘어섰다.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내몰린 전남이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촘촘한 복지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다문화가정 가구수는 1만 5666세대로 전국의 3.9%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많다. 가구원 수는 5만 1131명으로, 전국 다문화가정 가구원의 4.4%(7위), 전남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여성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을 포함해 1만 343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행정기관의 다문화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차별 없는 성장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분야 26개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도와 22개 시·군 가족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교육과 운영, 국적 취득비용 지원, 취업과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

족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출신 전남도청 공무원이 해당 시·군 가족센터 모국어 상담사와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남은 외국인 유입 없이는 지방소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은 매년 8000여 명의 청년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극심한 소멸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화 비율 전국 최고다. 인구유출로 인해 조선업 및 수산업 등 주요 산업이 외국인 없이는 지탱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남도가 정부 공모사업인 이민청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포용’이 절실하다. 편견과 문화적 차이로 ‘코리아 드림’이 산산조각 나는 사례들이 많다.

전남이 인구 경쟁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다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이주 외국인을 위한 정책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끌어주고 안아주는 서비스를 통해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이 전남에 조기 정착해 행복한 삶을 살길 기원한다.

믿음직스러운 광주시교육청 독서 운동

322개교 ‘1교1독서’ 프로그램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내 전체 학교에서 ‘1교1독서’ 프로그램을 운영기로 했다. 322개 학교가 최소 1개 이상의 독서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독서는 개인의 지적, 감정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매몰된 현실에서 균형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전인교육을 지향하겠다는 광주시교육청이 믿음직스럽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기존 1%에서 2%로 늘려 운영할 것을 각급 학교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서구입비(표준교육비)로 34억원, 독서교육 운영비로 13억원이 편성됐다. 시 교육청은 늘어난 독서 예산을 통해 풍부한 도서 자원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책을 읽으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과 자치단체, 직속 도서관, 교육지원청 등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독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책을 통해 역사, 과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비판적이고 분석적 사고를 발달시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크다. 독서를 통해 얻어지는 어휘력과 언어 능력 개선은 또 학업이나 이후 직장에서의 성과를 높여주는 밑거름이다. 다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사회·윤리적 질문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데도 중요하다.

남은 과제는 효율과 진정성이다. 아무리 정책이 뛰어나고 예산이 풍부해도 관계자의 열정과 독서교육의 이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교1독서’가 순항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식 프로그램에서 탈피하고, 독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시대, 첨단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체험학습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의 ‘1교1독서’ 프로그램이 지역의 지식과 문화의 허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